

사설

대학평가 기점으로 소통 공간 마련하자

지난 14일 202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가 나왔다. 우리학교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해, 평가 대상인 국내 주요 대학 45개교 중 8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6위를 기록한 뒤,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2020년을 제외하고 2년째 순위가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적지 않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학마다 객관적인 지표로 개선할 지점을 시사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학교도 공식 홈페이지의 대학평가 항목에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를 게시해놓는 것으로 보아, 해당 평가에 대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눈치이다. 따라서 외견상 드러나는 순위 부분에서 우리보다 낮은 대학이라 인식되는 학교에도 밀리는 예상 밖의 결과가 당혹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모든 종류의 대학평가에서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외견상의 순위가 아닌 세부지표이다. 순위가 한 두 계단 하락했다더라도 세부지표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다수 발견된다면 순위가 어떻게 대학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세부지표로 파악할 수 있는 우리대학의 현재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우리대학은 네 가지 평가 요소 중 학생 교육과 교육 여건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학생 교육 내 세부 지표 중 순수 취업률과 유지 취업률은 3년 연속 하락했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 2019년 6위였던 교육 여건이 올해 25위까지 떨어졌다는 점이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15점 만점에 3.88점을 받으며 평가 대학 중 34위에 위치했으며 등록금 대비 교

육비 지급률 역시 10점 만점에 1.36점을 받으며 33위에 위치했다. 교육 여건의 세부 지표들은 몇몇 지표를 제외하고는 우리대학의 일반적인 사회적 위상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학생교육과 직결되는 다양한 여건들이 우리 위상에 못미치고 있다는 점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대학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은 지표보다 순위에 더 연연하는 모양새다. 일례로 대학은 지난 몇 년간 평가 기관을 막론하고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거나 한 단계라도 상승했을 때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도, 그 순위가 한 단계라도 하락했을 때는 침묵을 지켰다. 대학평가에 대한 상반된 태도 속에 유추할 수 있는 바는 대

학이 지표보다 외견상의 순위에 연연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라도 대학은 구성원에게 지표에 대한 모든 점수를 공개하고 어떻게 개선해갈 것인지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구성원들은 지표를 둘러싼 대학의 향후 운영방안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대학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학은 이번 평가를 기점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기조에 대해 건전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공간에는 우리대학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대표자들이 모일 수 있어야 한다. 대학평가의 의제와 관련한 모든 정책적 권한을 지니고 있는 주체는 대학이며 건전한 소통 속에서 설계된 정책은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대학평가를 계기로 우리대학이 보다 건설적인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

세시봉

지역의 소멸



김나형 기자
nxhyxxng27@khu.ac.kr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경기 약 1,356만, 서울 약 950만으로, 전체 한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106곳에 달한다. 바야흐로 ‘지방 소멸’의 시대가 온 것이다.

지방의 청년들은 더 많은, 더 좋은 기회를 찾아 꾸준한 수도권으로 이주해가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동안, 지방 곳곳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에 처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점점 심화되는 공간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부는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건설하거나,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특정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기업도시 등을 운영해왔다. 이는 지역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향한 지방의 인재 유출은 더욱 심화돼가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 균형 개발 정책은 ‘현대대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 없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이 되면 많은 후보자가 지역 일자리 정책을 내세우지만 그중 대다수는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다.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난다는 말은 옳지 않다.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지방을 떠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단편적이고 선택권이 없는 일자리 정책만 내세운다면, 청년들은 계속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마저 모두 자신의 고향을 떠나려고 하는데, 지방에 연고가 없는 수도권의 청년들까지 지방으로 불러들이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임에 틀림없다.

그렇기에 소멸 위기의 지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균형개발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청년의 시선에서 현재의 지역 균형 개발 정책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주한 지역 소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캠퍼스 내 전동 킥보드가 가야 하는 길

킥라니주의보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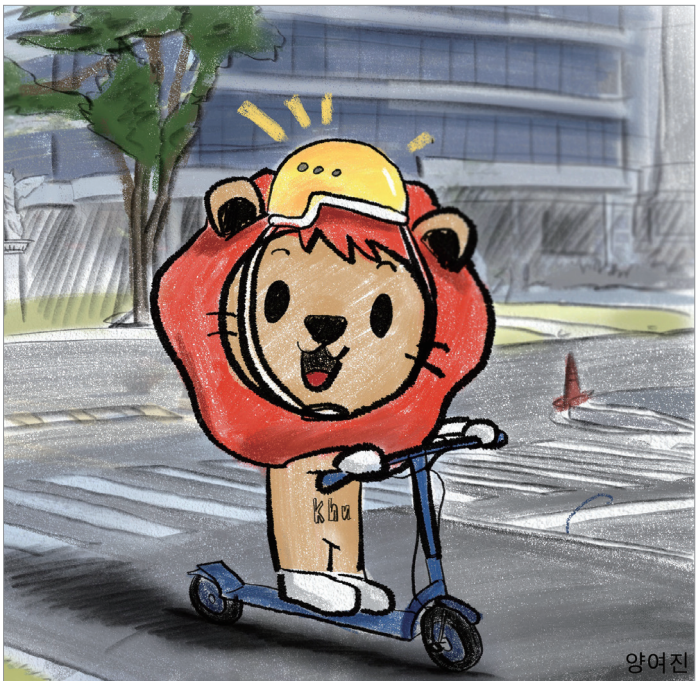
학교 주변에서 ‘킥라니’를 흔히 볼 수 있다.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뽐뽐 달리는 모습이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오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일컫는다. 학교 안팎으로 킥라니가 발견되는 만큼 안전 문제도 재정비가 필요해보인다.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체감하기 위해 동료 기자와 취재에 나섰다. 무질서하게 정문 앞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속에서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다. 안전 장비를 미착용한 채 운전을 시작했다. 서울캠퍼스 안에서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용이 금지였지만, 쉽게 정문을 통과했다. 전동 킥보드와 걷기를 비교해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결과 킥보드의 이점은 명확했다. 동료 기자는 손쉽게 오르막을 가로

질렀다. 편하게 오르막을 지나는 동료 기자를 보니 부럽기도 했다.

그러나 가파른 도로, 안전 장비 미착용, 보행자 등 사고 가능성은 항상 존재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21년 1,735건으로 4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편안함을 추구하며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편안과 안전 사이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편안과 안전 사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공존이다. 규정 마련에도 전동 킥보드 통제가 어렵다면 무조건 통제가 아닌 정확한 안전 정책 마련이 해답이다. 실제로 학생 중에는 교내 공유형 킥보드 탑승 제한 정책을 몰랐다는 학생도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학교에서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잠정 상태이다. 킥보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보다 정확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킥라니’가 아닌, ‘안전한 운전자’만이 캠퍼스에 존재하길 바란다.



만평 안전 운전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동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디